

통독조약 무슨 내용 담고 있나

동·서독의 완전통합을 규정할 '통일조약'이 오늘 양독 정부간에 조인될 예정이다. 동독 여성 의 시한부 임신중절권의 잠정인정 방법을 둘러싸고 집권당과 사민당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지만, 조약문의 대강은 이미 골격과 내용을 갖추었다. 10월3일 동독의 서독연방 가입과 더불어 발효될 이 통일조약에 따르면 서독 헌법의 일부 조항이 개폐되거나 새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되어 있고 동독은 서독보다 완벽한 제반 사회적 권리들을 1~2년의 경과기간 뒤 모두 상실한다.

통일과 동시에 동독 5개 지방(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은 주로 부활되고 동·서베를린은 통합되어 독자적인 주가 된다. 통일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으로 확정되었는데, 의회와 정부의 소재문제는 통일 뒤 결정사항으로 남겨두고 있다.

서독헌법 전문은 통일의 완수와 함께 통일연원 구절이 삭제되고 미통일지역의 연방가입 조항인 23조는 폐지된다. 또한 연방평의회에서 각주가 행사하는 표수도 인구비례에 따라 재조정된다. 한편 "서로 다른 사회관계로 인해 동독이 헌법질서에 완전히 적용할 수 없는 한에서, 그리고 그러는 동안" 서독기본법의 일정 조항이 동독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 서독헌법에 새 조항이 창설된다. 그러나 서독헌법의 기본원칙은 그대로 동독지역에 적용된다.

또한 서독이 외국과 맺은 제반 조약은 동독에 모두 적용되고 따라서 유럽공동체(EC)와의 조약도 '일정한 조정과 보충'을 통해 효력을 갖는다. 이에 반해 동독이 외국과 맺은 조약들은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서독이 넘겨받거나 변경 또는 소멸시킨다. 그밖에 동독 서독 행정체제, 재

진보적 '동독 사회복지' 1~2년내 폐기

1990. 8. 31

일요일 작업금지·장애자 의무 고용·가사노동일 등

수도 베를린 확정...서독 행정체제 그대로 적용

무체제 등은 동독에 그대로 도입된다. 동시에 10월14일 선거 전까지 새로 임명되는 '전권대행'이 동독 주들을 통치하고 정치적 이유로 형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즉각 복권되고 일정한 보상이 주어진다.

한편 조약문안 42조에 따르면 동독의 연방가입과 동시에 동독 의회는 서독의회에 1백44명의 의원을 파견하고 연방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연방평의회에는 '전권대행'이 파견되는데, 표결권 없는 자문기능만 주어진다.

동독의 국가재산은 행정기능에 따른 재산의 경우 전량 서독에 귀속되고 그밖에 금융재산, 국유토지, 기업 등은 공영신탁기

구에 이전된다. 국영기업의 매각 및 폐쇄보다 정상화를 고집하다 동독 신탁기구 의장직에서 서독 사민당 소속의 인물이 해임되고 기민련 추종인물이 이 기구를 장악했기 때문에 국유토지 및 기업은 신속히 사유화되거나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약문 41조에 따르면 지난 45~49년에 소련군이 점령군명령으로 몰수, 국유화한 소유는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래 통화통합과 동시에 실시되기로 예정되었던 사회통합은 전혀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고 환경통합은 아예 단어조차 사라져 버린 상태다. 이번 국가조약에서도 환경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고 도리어 동독의 사회

적 제반권리 중 서독보다 나은 것은 1~2년 사이에 모두 폐지된다. 가령 동독의 노동보호 조항 중 일요일 및 공휴일 작업금지조항은 93년말 폐지되고 신체 부자유자의 야간작업 금지조항 및 신체부자유자의 고용의무조항 등은 92년말 폐지된다.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을 위해 노동으로부터 방면되는 가사노동일도 91년 7월에 폐지된다. 현재 미해결된 사항은 8살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노동자에게 주어지는 4개월 이상의 유급휴가권이다. 동독쪽 협상당사자가 동독 여성의 반발이 두려워 서독의 5일 휴가조항 도입에 완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서독 민법에 규정된 노동자와

사무직원의 차별해고조건은 최근 서독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적용을 면했다. 그러나 혼자 자녀를 기르는 노동자에 대해 특별히 긴 해고예고기간에 관한 동독 법규는 91년말 폐기된다.

기민련이 서독보다 나은 사회 법규들을 당장 폐기하지 못하는 것은 10월14일 동독 주의회선거 및 12월2일 전독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로 불리는 흡수병합은 동독의 사회진보적 정책들이 모두 폐기되는 데서 드러나듯 발전적 지양의 통일이 되기보다는 퇴행적 통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크푸르트=황태연 통신원>